

2024 총선 보도 평가 토론회

언론 프레임과 포털뉴스, 민심과 어떻게 달랐나

2024년 5월 14일(화) 13:00

참여연대 아람드리홀 (서울 종로구 통인동)



2024 총선미디어감시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순서

사회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2024총선미디어감시단 집행위원장)

인사말	신태섭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주제발표	언론 프레임과 포털뉴스 이종혁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3
	제대로 된 선거보도 왜 실패했는가 김수정 민언련 정책위원장	10
	지역언론 이번엔 달랐을까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24
토론	고은상 MBC 기자회견	32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	34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36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38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44
부록	2024총선미디어감시단 모니터보고서 목록	50
	2024총선미디어감시단 조직구성	53
	2024총선보도준칙	55

주제발표

언론 프레임과 포털뉴스

: 민연련 포털뉴스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이종혁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한국언론학회, 2002)

- 바람직한 선거 보도
 - 유권자가 필요한 이슈와 정책을 분석, 해설하는 보도
 - 후보 간의 공약,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보도
 - 후보의 공식적인 발언, 공약, 정책 등에 대한 사실 검증
 - 언론의 선거보도 자체를 점검하는 보도
 - 선거의 의미와 참여의 의의 등을 강조하는 보도
 - 질적인 편파성의 극복
-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 보도
 - 부정적 캠페인의 대변인 노릇하기
 - 전략적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보도
 -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 남발
 - 기자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운색하는 인용
 - 부정부패 선거, 무관심 선거 방조
 - 비과학적인 설명 제공
 -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

2024 총선 보도준칙 (2024 총선미디어감시단)

-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를 한다
- 적극적인 검증 보도를 한다
- 유권자 중심,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보도를 한다
-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보도를 한다
-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하고 보도한다
- 선거여론조사 준칙을 숙지하고 부합하는 보도를 한다
-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선거보도를 한다
- 경마식 보도, 지역주의·정치혐오 조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저널리즘 원칙과 선거보도 (이종혁·정낙원·김세은, 2017)

- 객관성
 - 후보의 의혹을 충분히 검증하는 보도, 기자와 언론사의 주관적 추측과 의견 자제.
 - 폭로성 의혹 검증, 부정적 캠페인 비판, 기자의 감정 자제,
- 공정성
 - 경쟁하는 후보에 대해 보도량이 적절하게 배분하고(양적 공정성), 특정 후보에 유리한 프레임 사용을 자제(질적 공정성)
 - 불편부당, 질적 편파성 극복, 지역감정 자극 자제, 선거여론조사 준칙 준수
- 심층성
 - 경매중계식 전략 중심 보도 대신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는 해설 보도 수행(단순 동정 전달보다 정책과 공약 해설)
 - 충분한 정보 제공, 정책 의제 중심, 공약 검증, 전략적 용어 자제, 비과학적 설명 지양
- 공공성
 - 후보와 정치 엘리트의 관점이 아닌 유권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유권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투표의 의미를 강조하는 보도
 - 유권자 필요 정보 전달, 선거보도 자체 점검, 무관심 선거 지적, 정치혐오 유발 지적

모니터링 분석 종합: 객관성 측면

- 후보 의혹-막말에 대한 검증 부족
- 네거티브 캠페인 대변인 노릇
- 의혹과 막말에 대한 주관적 비판과 의견 이전에 진위 여부와 배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의혹-막말 사례
 - 국회 성일중 친일발언 논란
 - 국회 정우택 금품수수 의혹
 - 국회 장예찬 '난교 예찬' 등 막말 논란
 - 국회 도태우 '5-18 북한 개입설' 논란
 - 국회 조수연 '일제 옹호' 발언 논란
 - 국회 박덕홍 당선 축하파티 논란
 - 민주당 정봉주 '특별 경품' 발언 논란
 - 민주당 조수진 성범죄자 변호 논란
 - 민주당 공영운 건물 층여 의혹
 - 민주당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 민주당 김준혁 성상납 막말 논란
 - 조국혁신당 박은정 재산 급증 논란

“어느새 악독 변호사더라”...조수진 변호사 총선 보도 무더기 정정

아동 성범죄자 '아버지 가해 가능성' 변론 논란 10곳 정정 보도
문제 발언은 조 변호사 아닌 다른 변호사... "취재 없었다"
'강간통념' 활용 보도도 부정 "그런 의미 아닌데 오독"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 '강간통념' 조 변호사 반론 게재

CHANNEL 구독

‘공영운 후보 딸 갱투자 논란’ 보도 바로잡습니다.

입력 2024.04.05. 오후 8:08 · 수정 2024.04.05. 오후 8:18 · 기사원문

모니터링 분석 종합: 공정성 측면

- 정당 공천 관련 보도의 불평등
 - 민주당 공천 관련 보도량이 국힘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 민주당 "비명횡사" VS 국힘 "조용한 공천"
 - 조선·동아·채널A 등 보수 성향의 언론사에서 더 큰 편향 관찰됨
- 정당 유세 관련 보도의 불평등
 - 국힘 유세 보도량이 민주당에 비해 더 많음
 - 보수 언론은 한동훈 발언 키우고 이재명 발언에 문제 제기
- 조국혁신당에 대한 보도 차이
 - 보수와 진보 언론사 모두에서 보도량은 대체로 많은 편.
 - MBC와 오마이뉴스 등 진보 성향 언론들 사이에서 보도량과 긍정적 프레임이 더 많음
- 후보 의혹과 막말에 대한 보도 차이
 - 보수와 진보 언론의 정당별 후보의 의혹-막말 보도량 불평등
 - 특히 투표 직전 보수 언론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 관련 네거티브 보도 급증
 - TV조선의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과 김준혁 막말 논란 관련 보도 최대

국힘 '조용한 공천' vs 민주당 '문·명 충돌'...총선 풍향계 '흔들'

기사등록 2024/03/01 09:00:00
최종수정 2024/03/01 09:15:29

오마이뉴스 > 서울

[사설] 끝나가는 이재명당 공천, 마지막까지 비명횡사·친명횡재

조선일보

CHANNEL

한동훈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

입력 2024.03.29. 오후 7:14 · 수정 2024.03.29. 오후 8:18 · 기사원문

최수연 기자

한국경제

PICK

이재명 "정부, 사랑없이 때리는 계모 같다"...與 "재혼가정 비하"

입력 2024.03.27. 오전 9:55 · 기사원문

이슬기 기자

추가 감성분석 비교

(2/1~4/10, N=26,333)

	이재명	한동훈	윤석열
긍정	1356	1567	1927
부정	5701	4101	5219
중립	1738	1237	1593
합계	8795	6905	8739

이재명	YTN	MBN	오마 이뉴스	동아 일보	채널 A	한국 일보	TV조선	MBC	조선 일보	경향 신문	대전 일보	연합 뉴스	SBS	JTBC	중앙 일보	한겨 레	KBS	부산 일보	매일 경제	한국 경제	국민 일보	KBC 광주 방송	강원 도민 일보	아시아 경 제	CJB 청주 방송	전주 MBC	대구 MBC	JIBS	합계
긍정%	17.39	17.35	13.36	12.83	13.51	13.76	15.84	14.07	13.01	13.77	18.53	16.3	19.55	11.61	12.77	10.9	23	19.43	17.95	15.56	12.84	13.36	17.33	16.67	23.19	13.95	13.89	25	15.42
부정%	46.96	64.6	68.22	71.49	61.26	64.91	69.27	69.6	72.19	68.63	66.76	67.68	60.62	70.25	69.6	69.16	52.26	59.51	59.83	67.11	71.56	72.81	64.67	70.38	65.22	60.47	61.11	55	64.82
중립%	35.65	18.04	18.42	15.68	25.23	21.33	14.89	16.33	14.8	17.4	14.71	16.02	19.83	18.13	17.63	19.94	24.74	21.05	22.22	17.33	15.6	13.82	18	13.16	11.59	25.58	25	20	19.76
합계n	805	582	494	491	444	436	423	398	392	385	367	362	353	353	329	321	287	247	234	225	218	217	150	114	69	43	36	20	8795

한동훈	YTN	오마 이뉴스	MBN	MBC	채널 A	동아 일보	JTBC	경향 신문	한국 일보	TV조선	한겨 레	SBS	대전 일보	연합 뉴스	조선 일보	중앙 일보	KBS	매일 경제	한국 경제	부산 일보	국민 일보	KBC 광주 방송	강원 도민 일보	아시아 경 제	CJB 청주 방송	전주 MBC	대구 MBC	JIBS	합계
긍정%	22.21	12.33	27.25	15.51	27.91	19.44	17.59	11.86	16.13	26.62	16.5	29.47	32.38	25.09	23.11	21.33	37.75	30.39	20.67	34.48	23.17	17.53	36.7	22.83	29.69	20	33.33	35.71	22.69
부정%	42.15	71.97	55.41	71.19	45.06	66.05	67.59	72.44	66.13	56.82	67.34	52.98	55.87	62.36	62.67	65.78	42.65	51.38	66.49	44.25	64.02	70.13	42.2	66.3	57.81	66	50	57.14	59.39
중립%	35.65	15.71	17.34	13.3	27.03	14.51	14.81	15.71	17.74	16.56	16.16	17.54	11.74	12.55	14.22	12.89	19.61	18.23	12.85	21.26	12.8	12.34	21.1	10.87	12.5	14	16.67	7.143	17.91
합계n	662	503	444	361	344	324	324	312	310	308	297	285	281	271	225	225	204	181	179	174	164	154	109	92	64	50	30	28	6905

윤석열	오마 이뉴스	YTN	경향 신문	한겨 레	한국 일보	MBN	MBC	동아 일보	연합 뉴스	부산 일보	대전 일보	JTBC	중앙 일보	TV조선	조선 일보	채널 A	SBS	매일 경제	국민 일보	한국 경제	KBC 광주 방송	강원 도민 일보	KBS	아시아 경 제	CJB 청주 방송	전주 MBC	JIBS	대구 MBC	합계
긍정%	16.43	20.99	17.97	15.57	16.46	25.66	18	19.08	21.59	33.53	24.85	19.82	18.3	27.18	22.7	22.05	34.52	23.73	21.27	16.34	19.8	30.77	26.06	28.95	44.25	35.05	33.33	37.5	22.05
부정%	71.86	44.71	68.34	69.46	62.09	54.82	67.79	65.29	61.44	41.69	60.16	60.96	63.41	59.93	59.57	46.77	50.79	52.12	69.35	68.91	69.34	47.34	52.12	63.16	44.25	43.3	44.44	33.33	59.72
중립%	11.89	34.3	15.49	14.97	21.52	19.52	10.71	15.63	16.97	24.78	14.97	19.22	18.3	12.89	17.73	31.18	14.68	24.15	15.38	14.85	11.68	21.89	21.82	7.895	11.5	21.65	22.22	29.17	18.23
합계n	858	586	523	501	474	456	439	435	389	343	334	333	317	287	282	263	252	236	221	202	197	169	165	114	113	97	81	72	8739

모니터링 분석 종합: 심층성 측면

- '판세-전략'과 '여론조사' 이슈가 '공약'보다 늘 보도량 많음
- 단순 정보나 발언의 현장 증계에 치중(해설 부족)
- 정당 대표(비대위원장) 유세 지원 위주의 보도 경향
- 유명 후보 중심으로 격전지 소개하는 형식
 - 혈투나 대전 등 전쟁과 게임 용어 사용하며 승패를 가름하는 전략 분석 보도에 치중. 후보 인물 평가와 공약 정보가 전달되지 못함.
- 지역 언론이 의제 특집 보도나 후보 공약 비교 선포



모니터링 분석 종합: 공공성 측면

- '선거운동 소동 및 고발' 이슈가 '공약' 보다 많이 보도됨
 - '클릭수 장사' 관행이 선거보도에도 나타나,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정보 제공 부족.
-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대한 비판(선거 개입) 보도 부족
- 색깔론 무효과 입증
 -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반미운동 비판, 북한 도발 위협 제기, 운동권 비판 등의 이슈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음
- KBS는 총선 보도 양이 적었을 뿐 아니라 여론조사 등 단순정보 전달에 그침
 - 선거 냉소와 무관심 유발 우려

헤이슈

이천수, 유세 중 폭행·협박 당해...소속사 "따로 드릴 말씀 없다"

신영은 기자 shinye@mik.co.kr
입력: 2024-03-08 10:38:52

🔍 가 🗨️ 🔍 📄

N 뉴스

오마이뉴스

주요뉴스 총선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세계 랭킹

OmyNews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 선거운동 노골적으로 지원

입력 2024.03.25. 오후 1:32 수정 2024.03.25. 오후 2:02 기사원문

👍 253 🗨️ 338

🔍 🔊 🔍

용인에서 민생토론회, '이원모 공약' 실현 약속... '특례시 지원특별법 개정' 강조

제대로 된 선거보도 왜 실패했는가

김수정 민연련 정책위원장

선거는 유권자의 주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지만 선거보도는 유권자의 의제를 부각하기보다 후보자와 정당의 입장과 목소리를 쫓아다니고 확대하는 일에 훨씬 적극적이다.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후보자의 공약이 무엇인지 비교하고 검증하는 보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콘텐츠를 접하기는 어렵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정파성을 드러내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데 선정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를 되레 많이 낸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문제 있는 보도를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상황이라서 선거보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언론의 선거보도 실패는 유권자의 선거 관심과 참여까지 멀어지게 만드는 나선을 그린다는 점에서 이대로 두고 볼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선거 40일(3월 1일) 전부터 선거일(4월 10일)까지 △신문 △방송 △종편(JTBC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TV조선, MBN 저녁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다. 총선 보도 모니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문제 양상을 정리했다.

총선 보도의 문제를 살펴본 결과 ① 시민 의제 찾기 어려운 정책·검증 보도 그리고 내용적 한계, ② 정치혐오 부추기는 부정주의 보도, ③ 무비판적으로 차용·인용하는 자극적 표현, ④ 여론조사 결과 부정확 보도, ⑤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편향 보도를 꼽을 수 있었다. 물론 이외에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선거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모니터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했다.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되풀이되고 있는 선거보도의 구조적 한계, 즉 취재보도 방식의 답습과 유권자의 정치 정보 소비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보도 태도를 지적한다. 주류 언론의 관행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언론 불신과 정치 무관심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 의제 찾기 어려운 정책검증 보도 그리고 내용적 한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올해 초부터 3월 14일까지 20차례 열렸는데 단순 전달 보도 비중이 컸다. 1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65일간 15개 언론사의 민생토론회 보도 833건 중 단순전달이 595건(67.4%)으로 두드러졌고,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나 비판을 언급한 보도는 132건(14.9%)에 그쳤다. 총선과 관계없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보도는 102건(11.6%)에 불과했다.

신문방송 매체 통틀어 KBS의 경우 민생토론회 관련 보도 133건 중 114건을 단순 전달 내용으로 채웠는데 내용을 보면 긍정 평가를 유도하는 배경 설명까지 더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 “국가장학금 100만→150만 명으로”>(3월 5일 정새배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과 함께 한 민생토론회에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리포트 바로 앞에서 <“빛내서 빛 갚아요”…청년 파산 ‘경충’>(3월 5일 공민경 기자) 보도는 무료 재무상담 센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소액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첫 대출을 한 경우가 상담자의 42%”,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경우도 64%”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을 공공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도했다. 박장범 앵커는 “연 1.7%의 저금리인 학자금 대출도 갚기 힘들 정도로 청년들 사정이 어렵단 이야기”라며 “이들(청년)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리포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년지원 정책 보도가 이어졌다.

한겨레는 <사실/표 얻겠다고 ‘1일 1선심’, 총선 개입 도를 넘었다>(1월 12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표 되는’ 정책을 들고 나와 총선에 뛰어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논설/이보다 더한 포퓰리즘 관련 있었다, 윤석열표 ‘막걸리·고무신’ 선거>(1월 20일 이재성 논설위원)에서는 “개발독재시대의 ‘막걸리, 고무신, 돈봉투’가 이자 환급과 전기요금 인하 같은 21세기 판본으로 진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생토론회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과 ‘관권선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형설수설/‘20년 만에 그린벨트 화끈하게 푼다’…왜 지금?>(2월 23일 박중현 논설위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처럼 인화성 높은 개발 정책을 쏟아내는 건 관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실/나홀이 멀다하고 선심 공세…공수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3월 7일)은 “과거에도 선거 앞 대통령의 행보는 ‘선거개입’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엔 현직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공약처럼 비치는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는 방식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엄정한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의 행보는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는데도 “요즘 선관위는 뒷집만 지고 있다”며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까지 비판했다.

한겨레

hani.co.kr

표 언짢다고 '일일 1선심', 총선 개입 도를 넘었다

이보다 더한 포퓰리즘·관권 있었다, 윤석열표 '막걸리·고무신' 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부처별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모든 정부 부처가 '표 되는' 정책을 들고나와 총선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정부의

총선 개입이 이렇게 노골적이어도 되는가.



東亞日報

'20년 만에 그린벨트 화끈하게 푼다'... 왜 지금?

나홀이 멀다하고 선심 공세... 攻守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

총선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처럼 인화성 높은 개발 정책을 쏟아내는 건 관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식의 민생토론회를 1월부터 지금까지 17차례 개최했다. 사나흘에 한 번꼴이다. 수도권, 부산, 대전, 울산, 충남, 대구 등에서 열렸는데 상당수가 총선 승부처인 게 사실이다.

대통령은 엄정한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다. 그런데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의 행보는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 어차피 총선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따지기 힘들 것이라 생각될 것이다.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다. 과거엔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 중립 위반' 시비로 번지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실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선관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그림 1〉 대통령 민생토론회 '총선 개입' 비판한 한겨레와 동아일보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관련 언론보도 문제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알려졌다' '전해졌다' 등의 무주체 술어의 등장이 잦았다. 검찰이나 법무부 등 특정 기관이 흘린 정보를 받아쓰기 보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6일간 무주체 술어를 사용한 보도는 총 58건으로 조선일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경제 6건, KBS와 SBS, TV조선이 각 5건순이었다. 조선일보의 15회 보도 중에 무주체 술어 등장횟수는 48회로 집계됐다.

조선일보 <단독/박은정, 검사 때 1년9개월간 한번도 출근 않고 급여 1억 받았다>(3월 31일 이세영 기자)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31일 전해졌다"며 무주체 술어를 사용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이라며 직접 취재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병가 사유로 정신적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질병 휴직을 냈다고 한다",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차 병가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등 무주체 술어의 사용을 이어갔다.

조선일보 <단독/코인 사기 횡령범' 변호한 이종근, 대검 부장 때 사건 보고받고 지시>(4월 2일 양은경·이세영 기자)는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이종근 변호사가 현직 때 보고받고 지시했던 대형 금융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을 변호했던 것으로 1일 전해졌다"며 무주체 술어를 사용해 박은정 후보 배우자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대검 형사부가 직접 챙겼다고 한다",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형사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등 무주체 술어를 사용했다.

朝鮮日報 [단독]박은정, 검사 때 1년9개월간 한번도 출근 않고 급여 1억 받았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1년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박 후보는 발령 직후 연가(휴식을 통해 근무 능력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후보는 2022년 7-9월 병가(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병가 사유로 정신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병가 기간이 끝나자 이번에는 질병 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을 냈다고 한다.

법무부는 박 후보의 질병 휴직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이 소송이 이뤄지는 기간이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재차 병가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朝鮮日報 [단독] ‘코인 사기 횡령범’ 변호한 이종근, 대검 부장 때 사건 보고받고 지시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이종근 변호사가 현직 때 보고받고 지시했던 대형 금융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을 변호했던 것으로 1일 전해졌다.

2021년 브이글로벌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취급돼 당시 대검 형사부가 직접 쟁점했다.

이종근 당시 형사부장은 형사부 검사를 통해 수원지검에 ‘경찰에서 압수 수색 영장 등을 신청하면 요건을 엄격히 따지지 말고 열른 청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형사부는 또 경찰이 브이글로벌의 범죄 수익을 몰수 보존하려는 것을 지원하라는 지시도 수원지검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0여 억원의 잔액을 확인하고 몰수 보존을 추진했다. 수원지검은 전담 검사를 지정해 이를 지원했으며 진행 상황을 대검 형사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림 2〉 박은정 후보 관련 조선일보의 무주체 술어 사용 사례

박 후보 배우자 반박이 나온 뒤, 조선일보는 ‘검찰 안팎’, ‘한 법조인’ 등의 익명 취재원을 들어 추가 보도를 냈다. 선거 시기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엄밀하고 정확한 보도를 제시해야 하는데 검증의 충분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3월 4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수처가 2023년 12월 이종섭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조치한 상태였고, 대통령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3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15개 신문방송 매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KBS와 MBC가 각각 108건과 105건으로 보도하며 언론사 평균 보도건수 43.1건의 2.5배를 넘겼다. 하지만 두 언론사의 보도태도는 상반됐다. MBC와 JTBC는 <단독/돌연 “발표 중단”···직전에 ‘용산’ 전화 받았다>(3월 7일 박솔잎 MBC 기자)와 <단독/지워진 메모 속 ‘장관님’>(3월 11일 유선의 JTBC 기자) 등 보도를 통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서 이종섭 전 장관 관련 쟁점을 짚었다. MBC는 수사결과 발표를 2시간 앞두고 발표 회견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경위, 이 같은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통화를 한 전화가 ‘대통령실’로 가입자명이 되어 있었던 만큼 누구와 통화를 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JTBC도 이종섭 전 장관이 입장을 바꾸고 어떤 지시를 내려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가 멈추게 됐는지 수사로 규명돼야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대사의 직함을 달고 호주에 머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MBC와 JTBC의 보도와는 달리 KBS는 <단독/“도피 주장은 정치 공세···자리 연연 안 해”>(3월 17일 김현경 앵커)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현경 앵커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가) 요청한다면 일정을 조율해서 언제든지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답변에 앞서 “언제든지 조사받으러 귀국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정리하면서 인터뷰를 이어갔다. KBS는 다음 날인 3월 18일까지 해당 리포트를 포함해 총 8건의 보도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주장을

상세히 전했다. 논란과 의혹을 검증하는 계기는커녕 되레 이종섭 전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을 반복해서 내보내는 방식이었다.

총선 시기 KBS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과 공약을 따져 묻는 검증 보도가 적었고, 이종섭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 보도는 소극적이었다. 조선일보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적격성의 기준을 두고 보도할 필요성을 기준해서 볼 때 기사에서 익명 정보원에 기대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로 오히려 기사의 신뢰를 의심하게 할 여지가 보였다. 유권자를 위한 의제는 찾기 어려웠고 정책 보도는 주목도가 낮고 검증을 위한 보도는 의혹의 해소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

정치혐오 부추기는 부정주의 보도

선거 관련 정치 이슈를 접할 수 있는 정보 경로가 훨씬 다양해졌다. 신문방송 선거보도는 정보 경쟁력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신문방송 매체는 어떠한 보도에 주력하면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유튜브 정치 채널의 선거 정보 전달이 영향력을 키워가는 상황에서 신문방송 매체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거나 고수하는 방식으로는 주목을 유도하기 어렵다. 새로운 의제 설정과 내용과 형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번 신문방송의 선거보도는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뽑는 사람을 배제한 채 유권자를 관전자로만 취급하고 뽑히는 사람인 후보와 정당 관계자를 중심으로 밀착 보도하는 방식이 여전했다. 정치와 선거에서 공중을 소외시켰다. 유권자가 관심을 두거나 원하는 정책 의제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과 주장을 확인하고 유권자의 관심에 후보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나 승패 여부를 핵심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이슈가 될 만한 후보를 밀착 보도하는 취재 방식과 보도를 반복했다. 유권자가 보다 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후보를 탐색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소홀했다. 거대 양당 중심 보도는 소수 정당이나 신진 후보자를 소외시킬 수밖에 없고, 후보에 대한 흥미 위주의 부정적 이슈를 반복하는 식의 보도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관심을 오히려 축소하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중앙일보 <사설/민주당 위성정당의 위험한 정체성, 이재명 대표가 설명하라>(2월 15일)는 더불어민주당 비례 정당 선거연합 회의를 두고 “반미·중북 인사에게도 비례대표 공천(을) 주려는가”라고 ‘반미’, ‘중북’ 등 용어를 쓰며 색깔론을 꺼내두고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극단주의 세력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반미·친북·괴담 세력에 ‘비례 당선권’ 20석 중 절반 내줘>(2월 22일 김경화 기자)와 <사설/‘비(非)이재명’은 쳐내고 ‘반(反)대한민국’엔 국회 진입 길 터준다니>(2월 22일)는 진보당을 비롯해 범야권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인사와 단체들을 “반미·친북·괴담 세력”이나 “반(反)대한민국”으로 칭하며 색깔론 보도를 이어갔다.

朝鮮日報 천안함·광우병 괴담 세력에… 국회 길 터주는 민주당
민주당, 반미·좌파단체들과 정책 연합 추진

친북파 국회 입성 민주당이 보증했다

반미·친북·괴담 세력에 ‘비례 당선권’ 20석 중 절반 내줘

東亞日報 통진당 후신, 민주에 “지역구 15곳 달라”… 김재연 등 출마 채비
野, 위성정당 대가로 통진당 후신에 4석 보장

‘위헌’ 통진당 후신에 4석 내주는 민주당, ‘숙주 역할’ 자처하나

매일경제 통진당 잔당과 손잡으면서 이승만 깎아내리는 민주당의 정체성

한국경제 종북·반미 세력과 의석 나눠먹기… 또 다른 ‘이석기 사태’ 우려된다

〈그림 3〉 ‘반미’ ‘좌파’ ‘친북’ ‘괴담세력’ ‘통진당 후신’ ‘종북’ 등을 쓴 기사 제목

KBS는 2월 22일 <뉴스 12>, <뉴스 5>, <뉴스 6>, <뉴스 7>을 통해 <“민주당, 종북 세력화”… “쌍특검법 재표결”>(2월 22일 정재우 기자), <“민주당 통진당화”… “쌍특검법 재표결”>(2월 22일 정재우 기자), <여 “민주당 통진당화”…야 “쌍특검법 재표결”>(2월 22일 정재우 기자), <“통진당 세력 부활”… “쌍특검법 재표결”>(2월 22일 정재우 기자)을 보도했다.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정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 “민주당이 반미·종북·반(反) 대한민국 세력의 숙주가 되는 걸 자처”하고 있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림 4〉 2월 22일 KBS의 법야권 위성정당 관련 보도의 헤드라인

경향신문은 <민주당 위성정당에 진보당 합류하자…국민의힘 중복 세력 부활 색깔론>(2월 23일 문광호·이두리 기자)에서 범야권 위성정당에 “진보당이 합류한 것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이)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과거 통진당의 중복 이미지를 민주당에 이입해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민주당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도 읽힌다”, “진보당을 중복세력으로 구분지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을 두고 철 지난 색깔론, 이념 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힘의 색깔론 공세를 비판했다.

TV조선 <시사쇼 정치다>(3월 25일)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도봉구갑)가 지난 3월 21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0원을 표시한 것을 두고 대담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급조된 후보’라며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리기 쉬우니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이 출연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안귀령 후보자가 2년 전 직장을 그만둔 후, 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대변인 생활을 해왔던 청년 정치인이라며 재정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조된 후보’라고 지적하는 것은 기탁금까지 제공하며 ‘청년 정치인’을 활성화하겠다는 국민의힘 기조와는 다른 주장이라 비판했다. 청년 정치를 정치적 구호만 악용할 것이 아니라면 정당은 청년 정치인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정책적·실질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청년 후보자의 재산을 문제 삼는 송영훈 대변인의 비판은 아쉬웠다.

MBN <MBN 뉴스와이드>(3월 25일)에서 김철현 특임교수는 “중국 국적자의 10만 명이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면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친중 정서의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중국 국적자가 13만 명 정도 되지만, 2022년 기준 투표율은 13.3% 정도로, 전국에 흩어져 투표하다 보니 실제 지방정부 구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김철현 특임교수의 주장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주민 복리 의사결정에 외국인 참정권을 보장할 것인지, 폐쇄적인 기조로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경향신문 <0.2% 지방선거 유권자가 국정 혼든다는 여당…권성동 “중국인 내정간섭” 발언에 “혐오 조장” 반발>(2023년 6월 13일)은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했으며 “납세 의무를 지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권리 실현, 지방자치 활성화가 제도의 취지”라고 보도했다. 외국인 유권자는 늘고 있지만 투표율은 저조해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3월 말 기준 6·1 지방선거의 중국인 유권자는 9만 9969명으로 (중략) 전체 유권자(4430만3449명)의 0.23% 수준”이라고 짚었다. 정희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문제로 치환해 버리는 것은 사회에 혐오 문제가 더 깊게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혐오를 조장하는 허위정보를 바로잡지 않거나, 혹은 단순 인용하는 식의 보도는 지배적이지 않은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치인, 정당 대변인(논평 등을 포함)의 주장을 단순 인용하면서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기처럼 보도함으로써 해서 소수자와 약자를 비난하는 혐오를 아무렇

지 않게 허용하게 하거나 더욱 확산하게 하는 효과로 이어지기에 지양할 필요가 있다.

무비판적으로 인용·차용하는 자극적 표현

채널A <뉴스 TOP10>(2월 22일)은 총 방송시간 91분 중 72분인 80%가량을 더불어민주당 공천과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5차 공천심사 발표에 대해 진행자가 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에게 질문하자 이 논설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은 다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탈락했다”고 답했다. ‘친문학살, 비명횡사’ 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와 같은 조어 프레임을 연상시키는 답이었다. 김형주 전 국회의원(통합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옹호했는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며 ‘차도살인’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평가 항목에 있는 ‘당 기여도’를 ‘이재명 대표 옹호 기여도’라며,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이 공천 기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탈락시킨 것은 ‘차도살인’이라고 해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공천 결과를 두고 나온 표현만 나열해도 공천학살, 공천혈투, 자객공천 등 극단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남발됐다. 한동훈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구정물 공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썩은 물 공천이라고 해서 대립했다. 언론은 정치인의 자극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겨 개딸 경선, 패륜 공천, 친일 공천, 음란 공천, 뻔뻔 공천 등을 재확산했다.

3월 2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지원 유세에서 정치인의 막말을 인용한 보도 역시 심각성을 더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매만 때리는 의붓아버지, 계모 같다”며 재혼가정을 고려하지 못한 발언을 하고, “(경기도를 남·북부로 분도하면) 강원서도로 전략할 수 있다”, “중국에 세세(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세세 이르면 된다”고 발언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를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징징거리기 위해 정치한다”고 발언했는데, 언론은 비판의식 없이 이를 인용했다. 또한 두 대표의 설화 논란을 전하는 보도량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막말은 10분 내외였던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막말은 TV조선 38분, 채널A 55분, MBN은 31분을 방송했다.

언론의 선거 취재가 정치인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이루어지는 동행 취재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기사화가 쉬운 소재는 정치인의 막말이다. 정치인의 막말과 인신공격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면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을 오히려 키우는 부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해 실망하고 진영 갈등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오히려 정치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를 위한 공약이나 정책의 실행을 두고 토론하기보다는 이념 대결과 인물 비난 일색인 정치 구도를 보면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끼게 한다. 이를 대신해 유권자,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와 공약 제안에 대한 기회의 확대를 기획한 보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 부정확 보도

2024총선미디어감시단 보도준칙과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당이나 후보

자 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일 때에는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보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 2024¹⁾)는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1위-2위’로 보도하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라고 말하는 것, 수치를 단순 나열해 제목을 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킨 것이므로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선거보도 모니터에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두고 서열화를 보도한 사례를 집계한 결과 국민의힘이 앞섰다고 보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경우보다 보도가 많고,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동훈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이재명이 우세하다는 결과보다 많았다(〈그림5〉 참조).



〈그림 5〉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 왜곡 사례별 보도건수 비교 (1/1~3/24) ©민주언론시민연합

매일경제는 <정치에 속지 않기/여기서 이탈하고 저기서 흠어지는 민주당 지지표>(2월 20일 이상훈 MBN 앵커)에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국갤럽 조사(13~15일 1002명)에서도 국민의힘 37%, 민주당 31%로, 오차범위 안이었지만 절대값은 여당이 앞섰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 <한국갤럽/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 한동훈 24%·이재명 22%>(1월 1일 김명진 기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1일 나왔다”고 썼다. 오차범위 안에서 서열을 가려 한 위원장이 이 대표를 앞섰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한동훈, PK서 이재명에 12%p 앞서… 피습 동정론 없었다>(1월 13일 손명하 기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차기 대통령감 조사’에서 이재명

1) 신문윤리 (2024). 오차범위 내 선거여론조사 ‘왜곡 보도’ 여전...40개사 제재. <신문윤리>, 287호, 1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산 방문 도중 피습을 당한 이 대표에게 동정론이 쏠리지 않고 되레 지역 민심은 한 위원장에게 더 호응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1월 2주 여론조사로 ‘전국단위’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이다. ‘부산/울산/경남’은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8%포인트이다. 부산/울산/경남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33%, 이재명 대표 21%로 오차범위 내라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수치인데 한국일보는 한 위원장이 이 대표를 12%포인트 앞섰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24%, 이재명 22%...차기 대선주자 순위 첫 역전

한동훈, PK서 이재명에 12%p 앞서... 피습 동정론 없었다

차기 대선후보 양자대결 해봤더니...이재명, 한동훈에 뒤졌다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한동훈 24%"... 이재명에 2%p 앞서

韓 24% vs 李 22%...차기 대선주자 순위 갤럽조사서 첫 역전

〈그림 6〉 오차범위 내 왜곡을 보여주는 주요 기사 제목

〈그림 7〉 경기민연연이 4월 2일 발표한 오차범위 내 왜곡을 보여주는 기사 제목

조선일보 <한국갤럽/민주당 ‘공천파동’에 호남 지지율 14%p 하락>(3월 1일 박상기 기자)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호남(광주·전라) 지지율은 53%”였다고 “(1주 전 호남(광주·전라) 지지

을 67%와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뒷발’인 호남에서 폭락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2월 5주 여론조사로 ‘전국단위’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pm 3.1\%$ 포인트이다. 해당 조사의 응답자 특성표에 따르면 ‘광주/전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pm 10\%$ 포인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라 지지도는 2월 4주 67%, 2월 5주 53%로 오차범위 내라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또한 조선일보가 인용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전국단위 조사로 ‘광주/전라’의 경우 사례자 99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시도단위 조사로 공표 및 보도될 수 있는 최소 표본수 800명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었음에도 기사 제목과 내용은 지지율이 확실하게 떨어진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편향 보도

채널A <뉴스 TOP10>(3월 5일~6일 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해 1시간 36분 동안 대담을 이어갔지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 14분 정도에 그쳤다. 채널A <뉴스 TOP10>(3월 5일)의 경우 권향엽 후보의 논란에 대해 41분을 다룰 동안 유영하 후보에 대해서는 단 2분 동안 언급했는데, 서울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권향엽 후보가 이전 총선에서도 해당 지역에 출마했고, “당에서도 26년 이상을 여성 국장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내는 등 “정치 역량이 충분”함에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대선 시절 “배우자실에 있었던 이유 단 하나만으로” 공격하는 것은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종편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비판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려한 공천이라 평가받는 유영하 후보(대구 달서갑)의 공천 논란에 대해선 거의 다루지 않았다.

TV조선 <시사쇼 정치다>(3월 14일)는 정봉주 후보자의 ‘조계종 비하 발언’, ‘동료 정치인 막말’, ‘유권자 별레 표현’ 등 여러 건의 과거 막말 영상과 자료를 소개하며 비판했고, 50여 분간 정봉주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공천검증 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예찬(부산 수영구)·도태우(대구 중·남구)·조수연(대전 서갑)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장예찬 후보는 6분, 도태우·조수연 후보는 합쳐서 3분 이내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하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막말 비판은 무뎠고, 양당 논의 시간에 차이가 난다. 채널A와 MBN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채널A <뉴스 TOP10>(3월 14일)은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후보는 39분, 양문석 후보는 5분을 각각 할애하고,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자를 두고는 8분 동안 비판 대담을 진행했다. MBN <MBN 뉴스 와이드>(3월 14일)는 정봉주 후보 18분, 국민의힘 장예찬·도태우·조수연 후보자를 두고는 한꺼번에 10분을 다뤄 두 정당의 막말 논란에 대한 시간 편차가 나타났다.

야당 후보자 논란은 집요하게, 여당 후보자 논란엔 소극적인 보도는 시간 차이로 드러났다. TV조선 <시사쇼 정치다>(3월 29일)의 대담을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은 4분, 조국혁신당은 39분, 민주당은 43분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 증식과 관련한 전관예우 및 다단계 변호 논란에 대해 39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자(경기 안산갑)의 자녀 불법 대출 논란, 공영운 후보자(경기 화성읍) 자녀 품수 주택 증여 논란, 김준혁 후보자(경기 수원정)의 실언 리스크, 박재호 후보자(부산 남구)의 “나이 든 사람 출마는 노욕” 논란 등, 더불어민주당의 논란에 대해선 43분간 다뤘다. 반면,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자(충북 보은옥천영동

괴산)의 피감기관 1,000억 공사 수주 이해 충돌 논란과 김도읍 후보자(부산 강서)의 부산 강서구청장의 선거개입 논란은 합쳐서 4분에 그쳤다.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이슈는 거의 방송되지 않았는데, 온라인에서 동네 대파 가격을 공개하는 챌린지가 벌어지고 이수정 수원정 후보자가 한 단이 아닌 한 뿌리 가격을 대통령이 말한 것이었다고 옹호했다가 오히려 논쟁을 키우기도 했던 대파 논란은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선거보도 문제점과 모니터링의 한계

선거보도가 유권자에게 유의하고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 2024총선미디어감시단 모니터링을 통해 되짚어보았다.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야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이슈, 야당 후보의 공직적격에 대한 판단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슈를 주로 다루는 경향이 뚜렷했다. 정책·공약 중심 보도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인물 중심, 막말 이슈 중심 위주로 다뤄졌으며 지지율 경쟁이 심한 지역이나 거대 양당 갈등 이슈에 주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비이재명/민주당실망론에서 알 수 있듯이 거대 양당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은 정치 불신과 냉소로 이어졌음에도 이를 회복시킬 계기를 주류 언론이 선제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다.

유권자의 정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언론 공론장의 구축이 상당히 실패했고 조국혁신당 돌풍을 뒤쫓으면서 유권자 중심 선거보도에서 갈피를 잡는 데 시간이 걸렸다. 정책 의제에 대한 의제 설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후보 검증이 늦어지고 정당 사이에서 벌어지는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날카로운 검증 보도는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 책임을 방기하는 수준의 한계를 보이기까지 했다.

선거보도 모니터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 개선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자극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한계를 보였다. 선거보도 감시와 개선을 위한 감시활동에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모니터링 방식과 확산에 대해서도 자체적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 작성에서 보도 건수와 보도 시간의 비교를 겸하는 양적 분석과 보도 내용의 질적 분석을 더한 심층성을 강화하고 모니터 보고서의 발표 시기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신속성을 더했지만 확산성과 보도 생산자를 변화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모니터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수준을 확장하는 열린 구조를 갖추지 못했고 그것 자체가 근본적 한계였다. 감시단 구성과 운영을 새롭게 고안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언론 생산자와 언론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유권자 중심의 선거보도를 내리는 언론 내부의 노력과 외부의 압력을 결합하려는 시도의 증가를 모색해야 한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결합한 선거보도 감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거보도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민 결합의 기회를 확대할 참여 창구의 도입이 필요하다. 총선미디어감시단의 열린 구조와 참여 확대를 위한 실험을 기획하길 바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에 시민방청단을 모집해서 직접 참관하게 하고 심의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심의위원의 문제 발언을 지적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한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유튜브 채널 ‘언론아싸’로 공영미디어와 비

판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과 억압을 진지하게 다루었다.

선거보도 모니터 활동은 시민의 언론 감시 창구이자 비판과 질책의 목소리이면서 보다 나은 언론 역할을 기대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시스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주제발표

지역언론 이번엔 달랐을까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1. 2024총선미디어감시단 활동 개요 (지역민언련 활동 중심)

지역	모니터매체	모니터기간	모니터보고서	기타 활동
경기	△신문(경기일보, 경기신문, 경인일보, 중부일보) △방송(OBS경인TV)	3.4~4.9	주간보고서 6회 발표	
경남	△신문(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매일신문) △방송(MBC경남, KBS창원, KNN부산경남 방송)	3.4~4.9	종합보고서 발표 예정	
대전 충남	△방송(KBS대전방송총국, 대전MBC, TJB대전방송) △신문(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인터넷신문 2개사(디트뉴스24, 굿모닝충청)	3.25~4.9	총선보도모니터 보고서 발표 (4.22)	
부산	△신문(국제신문, 부산일보) △방송(KBS부산, 부산MBC, KNN)	3.4~4.9	주간 모니터보고서 5회 발표	총선보도 특별칼럼 5회 발표
전북	△신문(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김제시민의신문, 진안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부안독립신문, 무주신문, 완주신문) △방송(KBS전주, 전주MBC, JTV전주방송, 전북CBS)	3.4~4.9	총선보도모니터 및 기획모니터 등 11회 발표	논평 <여사 호칭 논란이 토론회 거부 명분이 될 수는 없다!>(3.28)
충북	△신문(중부매일, 충청타임즈, 충북일보, 동양일보) △방송(KBS충북, 충북MBC, CJB청주방송)	3.10~4.9	주간 모니터보고서 4회 발표	요구문 <지역언론에 바란다> 발표(3.18) 논평 <언론사 주최

				토론회 거부한 박덕흠 후보 자격없다> 발표(3.27)
--	--	--	--	--

각 지역 민언련은 3월부터 ‘2024 총선미디어감시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선거보도 모니터를 진행했다. 양적 분석 보다는 내용 평가 위주로 결과를 발표했고, 전북과 충북은 모니터 외에 후보자의 언론사 주최 토론회 불참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공론화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민언련이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참조해 공통으로 지적된 보도 경향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2. 지역언론의 총선보도 경향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구도로 치러졌기 때문에 정책도 검증도 실종된 선거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지역언론도 총선 시기 지역구를 중심으로 공천 과정부터 후보와 공약 소개, 지역 현안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지만 단순 전달 이상의 심층적 접근은 부족했다.

1) 검증평가 없는 공약 중계보도

공천을 마무리하고 후보가 확정되면서 정당과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는 코너, 기획이 마련되어 지역구별로 또는 ‘철도’ ‘지역발전 공약’ 등 주제별로 공약을 소개했다.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공약을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고 공약 비교, 전문가 평가와 실현 가능성 검증 등 내실있는 보도는 드물었다. 때문에 대부분 좋은 보도로 드물지만 공약 평가에 나선 기사들이 꼽혔다.

지역방송사는 공식 선거 시기 즈음해 지역구별 후보와 공약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는데 이번 선거에는 그마저도 생략한 지역도 있었다. 충북은 방송3사 중 MBC충북만 <좋은 공약, 현명한 선택>을 선보였다. 그마저도 오송참사, 기후재난 등 충북이 당면한 긴급한 현안에 대해 묻거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는 내용은 없었다. (충북민언련 3차보고서 중)

경기민언련 보고서에서도 ‘비교분석 보도 아닌, 정당에서 제공한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보도한 <OBS 경인방송>’ ‘적극적 검증보도 아닌, 선심성 정책 일방 보도하는 <경기일보>’을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기간 전국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각 지역마다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부분 지역언론에서는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을

전달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선거 개입’ ‘관건 선거’ 와 연관 짓거나 실현가능성을 따지는 보도는 드물었다.

경인일보는 3월 20일 <“공사가 현실화 폐지…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호 매입·임대”>에서 윤 대통령 주요 발언을 전했다. 경기민언련 3차 보고서에서는 경인일보가 제시한 보도준칙 ‘정확한 정보제공’ (정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일방적인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다.)과 ‘정부·지자체 시책 신중보도’ (선거기간 즈음 발표되는 정부 시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이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이끄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검증하고 신중하게 보도한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로 짚었다. 경기 지역언론은 총선 이후에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2월 13일 부산을 방문한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행보를 전한 부산지역언론 역시 ‘선거 개입’과는 전혀 연관 짓지 않고 발언을 부각하기만 했다.

2) 소수정당 배제…적극적인 유권자 의제 발굴 보도 부족

공약보도에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정당은 배제됐다. 부산 지역언론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며 기획보도와 별도 기사로 후보자 공약을 알렸는데, 거대 양당의 공약에만 초점을 맞춰 형평성과 심층성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먼저 국제신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주요 공약 3개씩을 받아 ‘문화·관광·체육’, ‘의료·교육’, ‘교통’ 3대 키워드로 정리해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그런데 3인 이상 다자구도로 펼쳐지는 지역구의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공약만 소개했다. 예외는 장예찬 후보뿐이었다.

부산일보도 정당별 부산 선거대책위원회의 1호 공약을 소개했는데, 거대 양당에 국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정당이 10대 공약이 게재한 것을 전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만 소개하며 의미 부여했다.

중부매일은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청주권 4개 선거구별로 후보 정보를 소개한 기사와 후보 인터뷰 모두 양당 후보만 포함시켰다.

한편, 22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의제에 대한 주목도 떨어졌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기후위기 대응, 원전-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시민건강과 안전권 확보를 위한 의제 등 다양한 총선 의제를 제안했지만 지역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정당에서 제시하는 공약이 아닌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발굴 전달하는 기획도 예전에 비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북민언련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전북MBC가 의제선정위원

회를 다양한 지역 의제, 소수자 의제를 선정해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기획 보도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부산일보는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 톱10’ 기획을 진행했다. 3월 11일부터 부산 유권자와 단체에 유권자가 제안하는 공통공약을 제안받아 소개하고, 이를 또다시 순위를 매겨 ‘톱10’ 공약으로 발표했다. 유권자 의제를 적극 받겠다는 좋은 취지였으나 부산일보 총선자문단 등이 뽑은 ‘톱10’ 공약은 산업은행 부산이전, 글로벌허브도시법 제정,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부산시와 상공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었다. 부산일보는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공통공약을 물었으나 조사대상 선택지에 산업은행 부산이전, 가덕신공항 조속 추진 등 상공계 요구가 반영된 공약들만 포함시킨 바 있다.

3) 거대 양당 위주의 기울어진 정당 보도

국민의힘 편향 보도 지적 다수, 소수정당 배제 경향도 여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더러지고 갈등이 노출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부산 지역신문은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과 결과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국민의힘 소식이 1면에 게재된 것과 달리,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 소식은 주로 4, 5면에 배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막바지 단계에서 부산 현역 초선 의원이 대거 탈락했는데, 부산일보는 부산에 쇠신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초선 의원의 본선 탈락은 재선, 중진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볼 수 있는 지점임에도, 부산일보는 외려 쇠신 바람이라고 해석해 국민의힘의 공천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대한 기사는 적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비명 횡사’나 ‘문·명 충돌’ 등의 용어를 사용해 민주당 갈등에 주목했다.(부산민언련 2차 보고서)

경기 지역언론도 정치권에서부터 나온 ‘비명횡사, 친명 횡재’ 프레임을 확대재생산했다. 국민의힘이 서울 지역구 전현직 의원을 경기도에 공천한 것을 두고는 ‘승부처’라며 긍정적 의미를 사용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통과 후보에 ‘친명 꽃아쓰기’라고 보도했다.(경기민언련 2차 보고서)

여야 지도부 방문을 두고 차이를 보인 보도도 있었다. 부산 지역신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방문을 1면에 보도했고 ‘구름 인파, ‘역대급 인파’라는 표현을 쓰며 부각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주말 방문을 고려하더라도) 비중면에서 차이를 보였고 ‘산업은행 이전’에 관한 이 대표의 입장 표명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방송이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고 했지만 국제신문은 ‘단독 이전 사실상 불가 입장’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부산민언련 3차보고서)

선거 막바지 중부매일도 4월 1일 <“민주당, 의미없는 정쟁으로 대통령·여당 발목”>, 3일 <“충청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1면 톱 기사로 국민의힘 유세 내용,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산 방문 유세를 따옴표로 전하며 부각했다.

전북과 충북민언련 보고서에서는 ‘조국신당’ 띄우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북은 지역방송의 선 거보도 유튜브 채널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JTV가 조국혁신당만 다루는 콘텐츠를 론칭한 것을 지적 했다. 충북민언련 3차 보고서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청주를 방문한 것과 관련 충청타임 즈, MBC충북이 여론조사 약진을 주목하면서 ‘돌풍’, ‘태풍’ 등 제목으로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4)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타 언론사 후보 검증 나서지 않아

선거 기간 ‘정우택 돈봉투’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지역언론인 <충북인뉴스>, <MBC충북>에서 처음 보도해 문제를 알렸고 뒤이어 CCTV 영상에 이어 녹취록까지 드러나면서 공천취소로까지 이어졌다. 불법 선거, 공정선거 감시에 지역언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례인데 충북 지역언론들은 적극 보도하지 않았다. 중부매일, 충청타임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이나 정우택 의원과 카페업주 측의 입장을 공방 중계한 보도 비중이 높았고 정우택 의원 말 을 그대로 기사 제목에 인용하기도 했다. 충청일보는 자체 취재 기사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의혹 취재에 무관심했다. 지역방송도 자체 취재는 없었고 CJB청주방송은 무차별 폭로전으로 규정하는 가 하면 KBS충북은 의혹 검증 보다는 ‘공천 경쟁 과열’ ‘정치 공세’에 초점 맞췄다.

‘당선파티’로 물의를 일으킨 박덕흠 의원 역시 지역언론은 소극 보도했다. CJB청주방송이 사건 개요와 선관위 검찰 고발, 당사자 반론 등을 상세히 전했다. KBS충북과 MBC충북은 해당 소 식을 단신처리했다. 지역신문은 박덕흠 의원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부산에서는 기초단체장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MBC는 <“우리 편 돼달라”.. 구청장 선거법 위반 의혹>(3/27)에서 사하구청장이 지역 관변 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같은 당 소속 이 성권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녹취 음성을 토대로 보도했다. 국제신문도 <부산 구청장 들, 같은 당 총선후보 노골적 홍보 물의>(5면, 3/29)에서 강서구청장이 축제현장에서 같은 당 김 도읍 후보를 띄워주는 발언을 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계도 조치를 받은 사실을 보도했 다. 지자체장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났는데, 타 언론은 추가 취재 없이 단순 소개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인 보도 행태를 보였다.

5) 어김없이 등장한 여론조사, 필요성과 정확성 고민 필요

지역언론의 선거보도 중 가장 주목받은 기사는 여론조사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인 관심 지역구를 제외하면 지역언론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 판세를 알려주는 유일한 보도인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포털에서도 잘 노출되고 관심이 쏠린다. 기사의 효용성이 큰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준 다. 선거마다 지역언론이 주력하는 보도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좋은 보도는 아니다. 단순 지지도 우열을 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경마식 선거 분위기를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단 한 번의 여론조사만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결과가 확정 결과인 양 호도될 우려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언론 대부분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보도했다. 모니터 결과 오차범위 내 차이에 순위를 매기거나, 세대별·연령별 하위 집단을 확대 해석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 등 문제를 보였다.

경기민언련 3차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일보>는 3월 22일은 용인갑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1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 48.4%,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 32.1% 결과를 <‘검경대결’ 용인갑, 이상식 초반 판세 우위> 기사 제목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3면에 <용인갑, 30대·60대 ‘이상식-이원모’ 오차범위 내 접전>에서는 가상대결 연령별 지지도 도표 중에서 접전 연령대를 선택하여 자칫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편집했다.

부산일보는 오차범위내 여론조사 결과에 ‘1위’ ‘2위’ 순위를 매기는 오류를 보였다. 국제신문은 KBS와의 공동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조사 응답자의 특정 연령대와 정치성향만 따로 분류해 분석하는 기사를 냈다. 국제신문은 <표심 못 정한 ‘2030 부동층’이 PK 접전지 승패 가른다>에서 ‘2030’ 응답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가 많으며 이들이 접전지에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기자협회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는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하위표본 분석의 경우 비율 수치와 함께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는 않았다.

더 큰문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주류 여론인 것처럼 호도될 가능성에 있다. 선거 기간충북은 6개의 지역언론사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다. 충북민언련 2차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6개의 언론사가 같은 날 동일한 결과를 보도한 것은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를 주류 여론인 것 마냥 오해하게 만들었다. KBS충북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리즈에 ‘민심’이라는 단어를 붙여(<[충선/충북 여론조사]① 청주 상당·서원 민심은?>) 이러한 오해를 더욱 부추겼다. 단 한 차례 여론조사로 어느 후보가 우세한지에 대한 일시적인 유권자 의견을 보도하는 일이, 과연 중대한 선거 기간에 언론사가 꼭 담당해야 할 일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충북민언련 2차보고서)

6) 선거구 획정·연동형비례대표 선거 등 선거법 현안 유불리로 접근

선거구 획정안이 2월 29일에서야 통과되었다. 선거구 변경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과 알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 지역언론은 이를 지적 하면서도, 지역구 의석수 유지 여부와 정당 유불리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기존 의석수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전북, 부산 지역언론은 의석

수 확보에 관심 보이지 않는 지역구 의원을 비판하거나, 정당별 유불리를 분석했다.

부산일보는 이번 선거구 조정은 부산 7개 선거구에 영향을 주는 대형 변수라고 설명했다.5) 선거구 조정으로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에 새로 생긴 부산 ‘북을’ 선거구가 여야 모두의 전략지로 부상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독립선거구가 된 ‘강서’, 합구된 남구 등 새롭게 조정된 지역구의 판세 영향도 짚어봤다.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선거구 조정 이슈를 살펴본 기사였다. (부산민언련 1차 보고서)

전북일보, KBS부산은 다음 선거에 앞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장기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는 칼럼에서 국회 표결에 미온적이던 특정 의원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전북민언련 1차 보고서에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2대 총선에서는 비례정당이 38개로 역대 최다였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및 위성정당 설립 등에 대한 비판 보도는 있었지만 정작 비례정당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 제공은 부족했다.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한 직후에도 부산 지역신문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만 조명했고 이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도 정당별 주요 비례대표나 대표 공약을 소개하는 기사는 찾기 어려웠다.

3. 22대 총선보도, 지역언론은 달라졌나?

지역민언련 선거보도 모니터 결과와 지역민언련에 확인한 바, 지역언론의 22대 총선보도는 달라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검증과 평가 없는 공약 중계 보도인데, 이전 선거에서는 별도 기획을 통해 검증에 나서거나 유권자 의제를 제시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기획을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강력한 구도가 작동해 정책도 검증도 실종된 선거였다. 하던 대로 선거보도가 아닌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도를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한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지역도 있었다. 전북의 경우 보도 측면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 감시보도와 기획보도는 악화되었지만, 각 언론사가 주최한 선거방송 토론이 활성화 되면서 후보 검증과 정책 경쟁을 견인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토론방송에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역사회 압력도 높아졌다고 한다.

토론

고은상 MBC 기자회견

토론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

토론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토론

22대 총선과 유튜브 : 분화된 복합 공론장과 정서적 양극화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22대 총선과 유튜브

미디어 생태계는 디지털 기술체계의 발전과 플랫폼 미디어 성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OTT와 유튜브로 상징되는 플랫폼 미디어는 다양한 콘텐츠,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 초국적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차별화되면서 미디어 생태계 변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더욱더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 중에서 유튜브는 정치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 관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현재 국내 유튜브 플랫폼에서 정치·시사 채널은 대략 550여개로 알려져 있으나, 매일매일 새로운 채널과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산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은 선거와 같은 대규모 정치 이벤트를 거치면 새로운 채널들이 등장하고 기존 채널 역시 구독자수와 조회수가 증가하는 등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높여간다. 이번 2024년 22대 총선에서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들은 기존 레거시미디어 채널에 비해 정치적 이슈와 여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 기간 유튜브 주요 정치·시사 채널들은 구독자수와 조회수가 증가하였으며, 업로드한 동영상 수도 평균 115개에 이른다. 특히 최근 유튜브에서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숏츠(shorts)와 실시간스트리밍(live) 수도 증가하였다. 숏츠는 평균 61개, 실시간스트리밍은 평균 52개 업로드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표> 22대 총선 기간, 유튜브 정치·시사채널 현황 (4월 7일 기준)

구분	채널명	구독자수	누적 조회수	전체 동영상수	총선 기간 동영상 수	총선 기간 Shorts 수	총선 기간 라이브 수
1	진성호방송	182만	3,830,896,827	15,554	267	0	0
2	신의한수	151만	1,184,778,757	9,659	18	7	114

3	배승희변호사	128만	276,502,452	783	51	0	25
4	고성국TV	103만	428,280,998	7,802	196	344	32
5	성제준	92.4만	91,590,189	1,148	122	10	30
6	펜앤드 마이크TV	90만	30,726,096	214	102	9	67
7	이봉규TV	88.4만	644,962,007	9,741	329	0	13
8	전우현 안보정론TV	88.4만	368,622,178	4,499	199	0	20
9	성창경TV	84.1만	1,479,018,476	21,071	561	0	0
10	가로세로 연구소	83.4만	60,342,604	839	23	0	79
11	뉴스데일리 베스트	80.7만	244,253,428	2,942	97	4	0
12	어벤져스 전략회의	64.8만	387,031,017	6,504	152	264	38
13	젊은시각	58만	442,026,830	2,171	7	47	44
14	신튜브 신혜식	56만	93,643,852	986	2	11	73
15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52.5만	495,756,724	13,771	135	6	0
16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155만	425,364,407	585	1	0	67
17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143만	247,177,892	1,435	22	14	1
18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132만	1,279,689,837	24,079	145	667	470
19	땅지방송국	132만	392,221,386	944	8	1	0
20	새날	96.8만	815,063,936	9,780	154	18	49
21	스픽스	83.4만	486,439,857	9,062	509	257	212
22	열린공감TV	80.7만	132,355,729	1,330	42	45	30
23	김용민TV	72.2만	424,740,662	7,680	101	101	44
24	언론 알아야 바꾼다	69.1만	466,512,163	2,617	145	0	0
25	빨간아재	67.7만	243,758,182	1,656	10	0	18
26	이동형TV	65.4만	277,008,405	1,571	0	0	36
27	고발뉴스TV	61만	278,775,312	3,436	0	18	20
28	정치일학	59.1만	312,995,173	965	50	0	0
29	시사타파TV	52.1만	236,141,825	4,424	24	13	45
30	박시영TV	51.9만	167,010,644	1,396	0	13	33

유튜브가 여론을 주도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면서 새로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총선 기간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의 주요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대부분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는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선거기간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였다. 유튜브가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가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2024년 총선 기간 동안 더욱 두드러진 유튜브가 매개하는 정치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제대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와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유튜브, 분화된 복합 공론장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유튜브가 매개하는 정치커뮤니케이션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와 오바마는 유튜브와 트위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2022년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정치·시사 채널의 동영상들이 하루 만에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정치학과 언론학에서는 유튜브가 등장한 이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기 연구들은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함께 정보 생산, 유통, 소비의 공간이 될 것으로 보았다. 즉 동영상 중심의 메시지 전달 창구로서 유튜브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 상에서 네거티브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이른바 폭로(혹은 탐사) 저널리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후 유튜브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유튜브가 선거캠페인과 시민운동 참여의 도구 등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튜브의 정치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유튜브가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정치 담론이 형성되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유튜브 정치적 효과가 증가하면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유튜브가 정치적 양극화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등의 부작용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유튜브의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은 개인이 시청한 동영상과 유사한 동영상을 반복 추천하여, 필터버블(filter-bubble)과 에코챔버(echo-chamber) 등 확증편향의 일상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유튜브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에는 누구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숙의적이고 절차적인 제도로서 작동한다. 우리 사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가져오고 정치적 공론장으로 기능한 것은 기존 레거시미디어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 기간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이나 정치인 유튜브 채널 등이 성장하면서 기존 미디어가 주도한 정치적 공론장은 새로운 공론장, 이른바 ‘유튜브 공론장’으로 분화하였다. 보수진보 성향의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들은 기존 언론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 담론을 주도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시민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기존 방송 출연 빈도보다 유튜브 채널 출연 빈도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치적 의제를 홍보하거나 선거운동하는 데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22대 총선 개표 상황을 생중계한 유튜브 콘텐츠의 접속자는 MBC 38만 명, SBS 7만8000명, KBS 4만9000명, JTBC 3만7000명, 채널A 3만2000명, TV조선 1만4000명, MBN 3000명 순으로 나타났으나, 진보 성향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개표공장’은 23만 명의 접속자 수를 기록했다(미디어 오늘 4월 10일 자 기사 참고). 이외에도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생중계하는 유튜버가 급증하면서 선거유세 현장 등의 생생한 정치 현장을 전달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더팩트 4월 9일 자 기사 참조). 이는 정치 담론과 여론을 주도

하는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의 영향력 그리고 시민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임과 동시에 기존 미디어 공론장에서 분화된 ‘유튜브 공론장’을 상징하는 사례들이다.

또한 새로운 공론장으로서 유튜브가 기능하면서 기존 레거시미디어도 이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 기간 기존 언론사들은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들과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일정 부분 이 콘텐츠들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시사IN 유튜브, 경향신문 유튜브 경향티비, 한겨레 공덕포차 등은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의 형식(format)과 구성 등을 차용하여, 채널의 구독자수와 동영상 조회수를 단기간에 늘릴 수 있었다. 진보 성향의 언론사 중심이긴 하지만 이러한 기존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들이 일정 부분 성공한 것은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문법을 바탕으로 기존 레거시미디어와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22대 총선 기간에 보수 성향의 채널들과 진보 성향 채널들이 내집단 갈등을 보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수 성향 채널들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을 공격하거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을 두고 입장차가 벌어졌고(정규재TV 등), 진보 성향 채널들은 비명계를 공격하거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발휘했다(이동형TV 등). 즉, 외부 집단을 공격하는 것과 함께 동일 이념집단 내 집단을 공격하는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는 유튜브의 정치적 공론장이 이 해집단이나 정파적 성향에 따라 분화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 관점에서 이제 유튜브는 새로운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존 미디어를 포함하는 복합적 공론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공론장은 앞으로 선거와 같은 대규모 정치이벤트를 통해 더 분화되고, 내재적으로 새로이 통합되거나 분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유튜브와 정서적 양극화

2024년 22대 총선에서 유튜브가 새로운 공론장으로서 긍정적 영향만을 보였을까? 단정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답할 수 있다. 유튜브는 여전히 폭로(혹은 탐사) 저널리즘이 상징하는 네거티브 선거 양상을 보였다. 또한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을 중심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확증 편향 등의 부정적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치·시사 채널들의 동영상 대부분은 상대 정치적 집단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메시지 또는 동질 정치적 집단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은 정치적 이념과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정치 소비의 장이라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은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한다. 기존 언론사나 방송사가 운영하는 채널을 제외하고 정치평론가, 정치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등이 운영하는 정치·시사 채널은 생산자의 정치적 이념 성향과 정파적 입장을 내재한다. 따라서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에서 나타나는 정파성이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하며, 채널 이용자들에게 확증편향을 강화하게 된다. 문제는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정서적 양극화는 존재 그 자체가 싫은 것으로 네거티브 보팅(negative voting)을 야기한다(장우영, 2022). 즉, 올바른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고 싶어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은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와 이념 집단의 대립과 갈등에 생산자 혹은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는 유튜브 플랫폼의 형식적 측면에서 유사 저널리즘(quasi journalism)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소구력을 높여 진영논리가 작동하는 정치의 장으로 유인하고, 플랫폼의 메커니즘 측면에서 이용자의 정보 속성에 토대한 알고리즘으로 유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확증편향을 강화한다는 두 가지 속성에서 기인한다(장우영, 2018).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들이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정서적 양극화, 이념집단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포털이나 온라인게시판 등 기존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난 정치적 양극화 구조는 유튜브에서 더욱 진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동일 이념집단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혐오차별 표현 등은 필터버블과 에코챔버 효과를 가져와 확증편향의 일상화를 촉진한다. 결과적으로 유튜브 공론장의 한계는 숙의민주주의적 여론 형성과 공동체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치 과정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불신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법·제도, 허위조작정보나 혐오차별 표현 등에 대한 내용규제 등 유튜브 올바른 진단과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주류언론과 시민의 선거공론장 대결, 22대 총선은 언론심판 선거였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2대 총선은 ‘언론 심판’ 선거

22대 총선은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옴을 상기시켜줬다. 물론 국민의 권력이 현실 정치에서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렵지만, 어쨌든, (아직은) 한국 민주주의는 민의에 의한 정치적 역동성이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결과적으로 여소야대로 출발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남은 임기 3년도 반쪽자리 권력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집권 기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이 된 것이다.

즉 유권자들은 ‘우리는 너의 통치를 믿지 못해’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그런 너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 그리고 너에게 그러한 권력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것이다. 한마디로 권력의 정당성 전부는 아니지만 근원적인 의문과 함께 권력의 정당성 상당부분을 부정한 것이다. 자칫 야당 주도의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가능한 ‘개헌가능 의석수’에 가까울 정도로 야당에게 표를 몰아준 것도 그러한 이유다. 한마디로 명백한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였다.

그럼 이게 다일까?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론만으로 간단하고 명쾌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오롯이 정권 심판론으로 ‘통치는’ 평가는 오히려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고 권력에 대한 심판이 갖는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은 다른 중요한 심판론을 은폐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한국 언론 심판론’이 매우 두드러진 선거였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 한국 언론 심판론이라는 양대 심판론 구도 속에서 제22대 총선 결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 의지 정도나 투표장에 나가는 결정을 하는 행위, 그리고 투표장에서 누구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냐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시민 개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정당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실제 국정과제와 정책 중심에 따라서 할 수도 있으며, 혹은 인물 중심으로, 그리고 이를 모두 종합하여 고도의 정세 중심으로 하는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과 이념 등 메타적 요인들이 이러한 개별적 요인들에 강력한 후광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번 선거와 같이 매번 선거는 그러한 메타적 요인이 압도적이지도 않고 결정적이지도 않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이번 선거의 두드러진 요인임에도 정권심판론으로 인식하게 하고, 특정 정당을 선택하며 인물을 판별하게 하고 모종의 정책을 기대하게 만들면서 결국 투표장으로 국민들을 이끌어 특정 정당과 후보를 찍게 만든 요인들은 더 엄밀한 분석과 판별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 정치권력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언론이다. 언론권력은 한국 정치와 경제 구조를 논함에 있어서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이지 않은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서 윤석열 정권의 권력구조와 분리시킬 수 없는 언론권력에 대해 아무런 평가나 심판론이 제기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치 언론’과 ‘언론의 정치’가 일상 정치환경에서 상수인 것을 감안할 때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언론이 제외된다면 제대로 된 선거결과 분석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분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옛말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타당하다고 불리는 ‘밤의 권력’이라는 조중동과 같은 보수매체와 보수정당과의 긴밀한 관계는 각종 정치 및 언론비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디어오늘>과 같은 미디어비평지가 ‘조중동’ 등 거대언론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세히 보도하는 이유도 이들 거대언론의 권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정치권력 구조와 매우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디어오늘>의 이러한 보도 자체가 정치-언론의 권력구조를 재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것이 ‘정상적’ 권력으로 인식하게 하며 유지하게 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윤석열 정권의 3무(무능·무자·무도) 정책은 KBS·YTN·TBS 등 공영방송 장악과 MBC·EBS 등에 대해 끊임없이 진행 중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 그리고 뉴스타파 등 비판언론 탄압에 압축되어 있다. 그런데 공영방송 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이 가능한 이유는 정권의 무도함에 전적으로 달려 있지 않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탄압이 무도하게 실현될 수 있던 것은 대다수 언론의 윤석열 정권 ‘3무 정책’에 대한 비보도 또는 단순사실 보도 또는 왜곡보도 때문에 가능했다. 총선 기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심의방식과 제재결과에 대해 주류

언론이 함구하면서 향유한 ‘언론자유’는 언론에 의한 언론자유 탄압의 특수한 성격이다. 이는 언론이 권력과 더불어 하나의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구조는 그 구조 ‘속’에 위치한 권력의 ‘내집단’과 구조 속에 있지 않지만 외부에서 권력을 옹호하며 지지하는 권력 ‘외집단’, 권력집단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권력 ‘준거집단’ 등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다. 언론과 권력이 맺는 관계 역시 같다.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한 권력기관과 공영방송 및 언론관련 기관 곳곳에 포진한 언론사 출신들이 권력의 ‘내집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언론인 출신 또는 언론관련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권력 ‘외집단’은 권력기관 외부에서 언론장악 및 비판언론 탄압 과정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언론권력 ‘내외집단’ 주변에서 취재·보도의 향방을 결정하는 언론권력 ‘준거집단’이 있다.

공영방송 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이 추진되고 가능한 것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과 언론이 맺는 긴밀한 상호관계에 의해 구성된 권력구조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언론권력 구조에 대한 심판으로 판별되고, 이를 확인해 비판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판별과 확인, 비판을 언론보도로 접할 수 없다. 이러한 권력과 언론간의 관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를 취재와 보도할 능력이 없어 무능하거나 또는 무도하게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이유다.

‘언론불신(不信)’에서 ‘언론불용(不用)’으로의 전환

국경없는기자회가 5월 3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62위로 지난해 발표보다 15단계 낮아졌다. ‘이명박근혜’ 정권 수준으로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한 것인데, 보수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언론자유 지수가 추락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한국 보수가 보수의 정치적 지향인 ‘자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국 언론자유지수의 추락 이면에 담긴 한국 언론의 근본적 문제다. 이번 언론자유지수 순위의 15단계 추락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언론자유지수가 30~40위권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언론의 자유 상태에 근원적인 구조적 언론 부자유의 상태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한국 언론은 정치권력과 무관하게 자신들 내부의 내적 부자유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언론자유지수 순위 평균이 40위 중반권인데 국경없는기자회 보고서에서도 한국 언론 관련 법과 제도, 경영 등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광고주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정치와 언론간의 관계 등이 그러한 구조적 원인에 포함된다. 결국 한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이미 구조적으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뉴스 전반의 신뢰도가 30% 미만이며 주요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구조적 부자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사회의 안전과 시민들의 삶에

위해하다는 인식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언론의 구조적 결함과 불신, 언론이 위해하다는 인식은 뉴스 이용률 저하와 포털뉴스 이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언론수용자 조사결과,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포털뉴스 이용률은 79.2%에서 69.6%(9.6%p↓)으로 떨어져 처음으로 60%대로 추락했다. 윤석열 정권 이후 ‘뉴스에 대한 탈포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20대 포털뉴스 이용률은 2021년 대비 13.5%까지 줄어들어 언론사로서는 미래 이용자까지 잃고 있다. 포털을 통한 언론 이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에서 포털을 통한 뉴스이용률 하락은 언론 전반에 대한 이용 하락과 동시에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언론사들에게 총선(국회의원선거)과 같은 전국 선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이용과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이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뉴스불신(不信)과 불용(不用)”이 한국 공론장의 고착화된 문제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총선 기간 선거보도의 이용과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향후 한국의 정치권력 지형에서 기존 주류언론의 위상은 재검토되거나 주류언론 자체가 기존 정치지형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총선은 언론지형 자체의 변화를 예고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언론불신의 언론불용 현상화는 ‘조중동’으로 불리는 거대 언론뿐만 아니라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리버럴 언론을 포함한 기존 주류언론의 어젠다 세터로서의 영향력까지 축소시키고 있을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이종혁 경희대 교수가 공동으로 분석한 이번 총선에서 포털 네이버뉴스의 선거보도 분석은 언론불신의 근거와 더 나아가 불용으로의 전환, 그리고 선거 영향력 약화를 추정하게 하는 정보들을 제공해줬다. 총선 기간 ‘조중동, 경제지, 종편’ 등 보수언론은 포털뉴스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그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보도,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각, 집권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슈 축소 보도를 이어나갔다. 한겨레를 포함한 리버럴 매체와 보수언론 모두 조국혁신당에 대해 소극적으로 보도를 했으며, 대표적인 공영방송 KBS는 아예 총선보도 자체를 회피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방향과는 정반대로 나타나 조국혁신당 돌풍과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났다. 한국 주류언론의 구조적 결핍, 뉴스 이용자의 불신과 불용이 2024년 22대 총선을 계기로 주류언론의 영향력 자체가 위축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총선 기간 중 주요 언론이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언론이 인용 보도한 각종 여론조사는 매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선거여론을 주도하는데 크게 활용됐다. 경마식 저널리즘이라는 비판에도 유권자들이 여론을 파악하는데 준거를 삼기도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와 이를 인용한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는 실제 총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여론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 단순히 여론조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언론의 선거보도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신호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계기일 수도 있다. 22대 총선 결과가 언론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언론권력 자체의 균열이 시작되는 변곡점으로 읽히는 이유이다.

‘주류언론’ 선거공론장과 ‘시민’ 선거공론장의 대결

이번 총선은 매우 불안정하고 혼탁한 상태의 ‘선거공론장’ 속에서 진행되었다. 시청률과 신뢰도 1위의 공영방송 KBS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장악되고, 높은 신뢰와 이용률을 가진 보도전문채널이자 준공영방송 YTN이 언론과 미디어 공공성에 무지한 저질자본에 부당하게 매각되었으며, 공영방송 MBC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탄압, 뉴스타파 등 검찰의 비판언론 강제수사 등 총선보도 공론장에 대한 노골적인 장악이 진행 중이었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무도한 공론장 장악이 정권 심판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정치와 언론권력에 의해 구축된 선거공론장 대신 시민들에 의한 ‘시민 선거공론장’이 강력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제22대 총선은 여와 야의 정치대결을 넘어서 주류 선거공론장과 시민들의 시민 선거공론장의 대결이 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 직접 영향을 준 선거이기도 했다. 또한 이번엔 드러났듯 우리는 언론은 장악되어도 여론은 장악되기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다(물론 이번 선거에서 그러했다는 것이지, 이것의 영속화를 속단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 보수언론 △리버럴 언론 △정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장악되고 통제된 언론 및 이를 보조하며 지원하는 유튜브나 미디어로 구성된 ‘주류 선거공론장’과 △시민들의 지지·참여·지원을 받는 비판언론 △독립언론 △개별 시민 언론들로 구성된 ‘시민 선거공론장’이 총선이라는 가장 치열한 정치적 분투의 공간에서 대결했다. 물론 어느 시대에도 대안적 시민들의 공론장은 존재했다. 하지만 언론3불(불신, 불용, 불능)의 시기에 형성된 시민들의 공론장이 기술적, 재정적, 대중적 토대를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금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별도의 논의 공간에서 지금 시기 시민 선거공론장의 특성과 함의는 분명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선거보도 모니터링 형식과 내용 및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도, 시민들의 언론 공론장의 양상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한국 언론의 지형을 파악하여 시민들의 언론과 소통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번 토론회의 궁극적 목적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2024총선미디어감시단 모니터보고서 목록

언론·포털·선거심의 모니터(27건)

발표일	제목
2024-03-05	[네이버뉴스 2월 넷째주] 더불어민주당 공천보도 국민의힘보다 2.5배 많고 선거보도 3건 중 1건이 민주당 '공천 논란' 쏠림
2024-03-07	조선일보와 KBS, 범야권 위성정당 때린 '반미' '친북' 색깔론 보도 최다
2024-03-07	종편 '민주당 공천 논란' 올인, 소문에 극단 표현까지 '친명 공천' 비판
2024-03-08	중편 시사대담 호들갑, "파란색1' 민주당 선거운동이자 확증편향"
2024-03-08	[선거심의를 심의하다④] '종편은 균형적'이라는 위원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중립적'이라는 위원장
2024-03-12	[포털뉴스 3월 첫째주] 공천보도 편차, 민주당 '계파갈등' 국힘 '조용한 공천' 조국혁신당 주목 속 KBS 0건
2024-03-13	민주당 공천 논란 방송, 국힘에 비해 4.5배 많았다
2024-03-15	어린 시절과 자녀 돌보는 사진까지, 종편의 도 넘는 '한동훈 띄우기'
2024-03-15	'관권개입' 대통령 민생토론회, KBS 133건 보도 압도적 1위
2024-03-15	[선거심의를 심의하다⑤] "신방과 교수 33년" MBC 예보 '파란색1' 제재 7인의 주장
2024-03-19	[포털뉴스 3월 둘째주] 공천보도량 뛰어넘은 '막말' 논란, 비리·일탈 등 자극적 뉴스 급증
2024-03-21	'런중섭' 비판 없는 KBS 108건 최다, '이종섭 앵무새' 단독인터뷰까지
2024-03-21	종편 막말 질책도 편파적, 경봉주 50분 vs 장예찬 6분
2024-03-22	윤석열 대통령 '대파 875원' 속 빼고 '특단조치'만 부각?
2024-03-22	[선거심의를 심의하다⑥] 유가족 의견 무시한 채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다" 발언에 '주의'
2024-03-26	[포털뉴스 3월 셋째주]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 '윤 한 갈등' 집중 보도 속, 윤석열 대통령 주요 인물 1위
2024-03-29	'출국 논란'부터 '수석 사퇴'까지 MBC만 콕 집어
2024-03-29	여론조사 '한동훈 유리' 3배 많았다...이유는?
2024-03-29	[선거심의를 심의하다⑦] 심의 대상 기준 묻자 "모든 사회적 쟁점이 선거 쟁점"
2024-04-02	[포털뉴스 3월 넷째주] 박은정·양문석 야당 후보 논란 늘고 양당 지도부 유세따라 거친 말 직격
2024-04-05	조선일보, '알려졌다' '전해졌다' 남발하며 박은정 논란 주도
2024-04-05	날씨보도에 '1' 썼다고 MBC 관계자 징계 의결한 선방심위
2024-04-06	이재명 막말 논란은 띄우고 대파값 논쟁은 소극적으로
2024-04-07	[포털뉴스 4월 첫째주] 투표 앞두고 조국혁신당 보도량 급락, 민주당 네거티브 보도 증가

2024-04-09	‘청년 정치인’·‘외국인 참정권’ 차별적 견해 드러낸 종편 출연자
2024-04-09	선관위 ‘파탈막에 시민 인증샷’…조선일보 “아권 지지층의 선거 희화화”
2024-04-12	“백이 아니라 파우치” 디올백 논란에 법정제재 예고

지역 모니터(15건)

발표일	제목
2024-03-25	[전북]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에 쏟아진 지역 언론들의 비판, 전북 연고 정치인에 거는 지역 언론들의 기대감 반복
2024-03-25	[전북] 전북 지역 언론들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결과 분석 정리
2024-03-27	[충북] 어김없이 등장한 여론조사, 필요성과 정확성 고민해주기를
2024-03-27	[경기] 자사 선거보도 준칙 준수하길 바란다
2024-03-27	[부산] 격전지 부각하고 전쟁용어 남발하는 구태 보도 여전히
2024-04-03	[충북] 후보 공약 검증, 유권자가 바라는 정책 전달하는 데 더욱 힘썼으면
2024-04-03	[경기] 선거보도 특정 견해, 특정 세력에 편향되지 않아야
2024-04-03	[전북]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후보 KBS 토론회 보이콧 논란, 논란과 별개로 비판 이어지는 이유는?
2024-04-03	[전북] 제22대 총선 선거 기간 혐오 표현 감시하는 시민사회 활동 시작, 언론의 역할은 없을까?
2024-04-08	[전북]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문헌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책임은 어디에?
2024-04-08	[전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 대한 해석 신중해야
2024-04-09	[전북] 총선 ‘정치선거 유튜브’ 확장 나선 전주MBC, JTV전주방송
2024-04-09	[경기]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펼치는 사설이 되어야…
2024-04-11	[충북] 후보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공약 팩트체크한 언론들
2024-04-18	[경기] 공약정책 검증이 부족했던 선거보도

부록

2024총선미디어감시단 조직구성

○ 명칭 2024총선미디어감시단

○ 공동대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남석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성진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양진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박 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집행위원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경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간사
이경자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장희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박정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계희수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 참여단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상 8개 단체)

2024총선보도준칙

1.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를 한다

- △ 선거보도는 특정 견해, 세력, 집단에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선거보도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하며, 총선이 실시되는 모든 지역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 또는 방송하는 경우,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일반 뉴스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선거를 앞둔 기간에는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보도해야 한다.
- △ 외신이 바라보는 한국 선거 판세 분석 등의 보도를 인용할 때는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 △ 선심성 정책 발표나 대통령, 행정부처 관료들의 순시 때 지시되는 각종 사업들이 선거 지원 활동이 아닌지 경계하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 금권 선거나 관권 선거, 불법 타락 선거는 철저히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 정확한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인터뷰 또는 인용 내용을 임의로 첨삭하여 발언자의 의도와 어긋나게 보도하지 않는다.
- △ 선거보도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를 혼동케 하지 않는다. 특히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 적극적인 검증 보도를 한다

- △ 선거보도는 특정 후보에 대해 유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진실 추적을 포기하거나, 기계적 균형에만 치중하거나, 양시양비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 △ 학력, 경력, 병역, 납세, 재산, 전과뿐 아니라 인권 감수성, 도덕성, 일관성, 공직 적합성 등의 합리적 기준에 입각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에 대한 주도적 검증 노력을 철저히 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근거 자료는 두 사람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에게 확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특정 언론사의 논쟁이 있을 때에는 양측의 주장을 팩트체크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한다.
- △ 금권 선거나 관건 선거, 불법·타락 선거 운동 등 선거법 위반 사안은 집요하게 추적 보도한다.
-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보도한다.
-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팩트체크를 통해 적극 검증해 같은 기사 안에서 명확히 밝히고, 혐오표현 및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주장일 경우 보도하지 않는다.

3. 유권자 중심,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보도를 한다

- △ 유권자가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을 평가하며,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선거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 전달 : 유권자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이해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비교해볼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유통이 확산되면서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적 성향과 기호에 부합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편향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가 갈등과 대립의 장이 아니라 소통과 타협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보도가 중요하다.
- △ 여론조사를 기획할 때는 후보자 지지도 이외에 정책 이슈별 반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설문을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 △ 비교 분석 보도 추구 :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보도할 때는 후보와 정당에서 제공한 자료를 나열하는 방식은 자제하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타당한지 살펴본다. 공약 분야별 또는 지역 이슈별로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발언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재원조달방안과 이행 방법 등의 실현가능성도 평가한다. 단,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할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지 않는다.
- △ 후보자의 유명세나 인지도 등에 기반한 촌평(gossip), 각 후보자나 정당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형 유세 보도는 자제한다. 특히 후보자의 가족 등이 연예인인 경우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 위주의 보도는 하지 않는다.

4.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보도를 한다

- △ 선거 관련 보도량을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하지 않는다.

- △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한다.
- △ 공정하게 엄선된 전문가뿐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질문과 논평할 기회를 많이 그리고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고려해 정치권력과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신진 후보나 소수 정당 소속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한다. 다수당 및 소속 후보, 인지도 높은 후보들과 소수 정당의 후보자 간 양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 △ 새로운 정치 리더십과 올바른 정치 문화 창출에 도움이 될 신진 세력과 사회적 소수자 그룹, 여성계의 주장을 적극 반영한다. 신진 후보, 군소 정당 및 소속후보의 정책과 공약 중에서 일반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에 의미 있고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도한다.
- △ 신진 후보, 군소 정당 및 소속 후보를 무분별하게 이색 후보로 다루거나 이색 후보들과 함께 촌퍼거리로 다뤄 그들의 정책과 공약이 흥밋거리로 전락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
- △ 인터넷을 통한 후보와 유권자의 쌍방토론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게시한다. 공명선거 및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 △ 자원봉사형 선거운동 등 새롭고 긍정적인 선거참여의 양상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또한 선거참여와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기획보도를 추진한다.
- △ 시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및 방법, 참여 민주주의의 확립과 정치 개혁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이를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낸다.
- △ 선거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수시로 쉽게 풀어 설명한다. 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 권역별 등 비례대표 선거제의 유형별 차이점, 선거구 개편 등 새로운 선거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이해와 주권 행사를 돕는다.
- △ 시민단체의 건전하고 적법한 공명선거 감사·독려 활동을 적극 소개한다.

5.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하고 보도한다

-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과 방송·신문·지면·온라인·소셜미디어 등에서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폭로성 주장은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한다. 관련 제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에 주의해야 한다.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이나 단순한 인신 공격성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 △ 특정 이슈가 진실이라고 판단되면, 특정 후보나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양적 균형만 맞추지 말고,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주장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도한다. 그러나 폭로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나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반론의 기회를 회피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

- △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을 보도한 후, 폭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그 내용을 정정한다.
- △ 다른 매체가 보도한 사안을 알릴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매체의 보도를 알릴 때에도 사실 확인을 거듭해서 보도하려고 노력한다.
- △ 선거일 전날 등 선거가 임박한 시점의 폭로에 대한 보도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한다. 특히 폭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까지 폭로 대상자의 반론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 △ 후보자의 자질 또는 친인척 관련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해당 공직수행의 자격을 판단한다는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신중하게 보도한다.

6.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을 숙지하고 부합하는 보도를 한다

- △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이므로, 국민을 대표한 의견으로 과장하여 보도하지 않는다.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주의한다. 조사결과가 갈등적 사안에서 한 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보도하지 않는다.
- △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해서 해설하지 않고 수치 중심으로 정확하게 보도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일 때에는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보도한다.
- △ 선거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보도는 자제하며, 후보자 캠프와 선거전문가의 선거전망과 판세 분석 기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보도한다. 인기투표·모의투표 등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사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특히 현저히 다른 여건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지 않는다.
- △ 여론조사를 보여주는 시각자료(그래프, 그림, 표, 동영상, 사진, 각종 이미지)는 프레임이나 색조, 각도 등의 변화에 따라 유권자의 인지적 정서적 판단과 해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시각자료를 통해 경쟁자나 경쟁 집단 사이의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해서는 안 된다.
- △ 여론조사 보도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시청자와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 다른 매체나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할 때에도 위의 원칙을 적용한다.

7.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선거보도를 한다

- △ 따옴표 저널리즘 금지 :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각종 보도자료, SNS나 블로그, 댓글 등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따옴표로 단순 인용 전달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근거와 맥락에 대해 검증하고 분석하지 않은 단순 인용 전달 보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캠페인이나 허위조작정보를 확산시켜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선거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언론이 단순 전달자, 유포자로 전락할 수 있다.

- △ 익명의 정보원·취재원에 의존하는 보도는 정당한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및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재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되, 인터뷰 대상자 또는 취재원의 신원이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데스크와 상의 후 가명 또는 익명으로 보도한다. 단, 불가피하게 익명(또는 가명)을 쓰는 경우에도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노력한다.
- △ 취재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 또는 녹화는 보도 또는 방송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한다. 녹취 또는 녹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할 경우 취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기사 본문을 모두 읽지 않고, 기사 제목만을 읽는 일명 ‘제목 독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선정적인 제목,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발언에 의존하여 유권자들의 가치판단을 유도하는 제목, 기사 내용과 무관한 제목 등을 달지 않는다.
- △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도 또는 방송 내용의 변경이나 보도 또는 방송 중지를 요구하면 충분한 사실 확인을 통해 성실히 대응한다. 대응 결과 보도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정정 보도를 한다. 사실이 아니지만 반론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반론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 △ 유권자의 비합리적 정서나 편견을 자극할 수 있는 용어 또는 혐오표현,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 방송 화면이나 보도 사진의 경우 촬영된 화면의 편집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과를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의 경우 군중의 환호 등 현장음의 크기를 왜곡하지 않는다.
- △ 정당의 단순 동정을 보도 또는 방송할 때 특정 후보자 등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며, 선거유세 장면 등을 내보낼 경우 군중 규모나 반응은 당시 최대치를 촬영,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8. 경마 중계식 보도, 지역주의정치혐오 조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 경마 중계식 보도 금지 : 선정적인 경마 중계식 보도를 하지 않으며 게임이나 스포츠 용어의 사용을 삼간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여론을 중심으로 선정적 경마 중계식 선거보도는 선거를 대립과 갈등 구도로 만들고 후보들의 우열과 서열을 부각해 선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유권자를 객체이자 관람자로 만들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사례 : 난타전, 추격, 선두질주, 한판승부, 역전, 뒤집기 한판, 굳히기)
- △ 전쟁 묘사 보도 금지 : 선거를 전쟁처럼 묘사하는 보도를 하지 않으며 전쟁이나 군사 용어의 사용을 삼간다. 선거는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할 공직자를 선출하는 행위인 반면, 전쟁은 국가 간 싸움을 의미한다. 선거와 전쟁은 그 행위의 성격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다

르다. 선거를 전쟁의 일환으로 보는 표현은 갈등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해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고 유권자의 선거 참여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사례 : 오차범위 내 접전, 집중 포화, 유세전, 격전지, 수성, 화력, 열전, 깃발, 철옹성, 출정식, 수세, 공방, 공세, 진영, 방어, 맞불, 수성, 탈환)

- △ 지역주의 조장 보도 금지 :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지역주의 선동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보도와 표현을 하지 않는다. 지역감정, 지역 여론에 편승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비호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 지역별 득표 분석은 현상 적시 이외엔 하지 않는다. 지역감정 또는 지역 정서를 부추기는 각 정당의 발표나 후보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하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간 대립구도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는 보도하되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도한다.
- △ 정치 혐오주의 조장 보도 금지 : 유권자의 정치적 피로감, 냉소와 불신, 혐오를 심화시켜 민주주의와 참여의 위기를 불러올 정치 혐오주의 조장보도를 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이 과열되었거나 불법 선거운동행태가 문제일 때에는 혼탁한 현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적 행동을 지목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후보자들의 이합집산만을 부각하는 보도도 정치적 냉소주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이 갖는 정치 개혁적 의미를 무시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다양성을 혼란과 분열로 묘사하지 않는다.
- △ 혐오표현 보도 금지 : 선거 시기에 많은 후보자는 자신의 표를 결집시키는 일환으로 혐오 표현을 이용한다. 이념 대립 및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도 하게 된다. 선거보도는 이런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여 유권자의 비합리적 정서나 편견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024년 올해의 미디어스타



미취학 아동의 미디어스타

미디어가 어렵게 느껴졌다 아동 표제어와 표절방지

2024년 올해의 미디어스타 표절방지대회